

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  
전문위원 권 오 숙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4 - 45  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  
다. 제출일자: 2024년 4월 15일  
라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4일

## 2. 제안이유

관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설치된 ‘서울강서시니어클럽’ 운영 법인과의 협약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,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시설장	소재지 (규모)	직원 현황	現 위탁현황		
				수탁법인명	대표	수탁기간 (최초 운영기간)
서울강서 시니어클럽	오현균	강서구 방화동로 124-1, 3~4층 (297.48㎡)	26명	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	김정호	2019. 9. 10. ~ 2024. 9. 9. (5년)

나. 위탁사무 내용: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시설 및 인력 운영 등 운영사무 관리 일체

다. 위탁기간: 2024. 9. 10. ~ 2029. 9. 9.(5년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: 민간위탁 '재위탁<sup>1)</sup>' 공개모집

마. 추진일정

- 재위탁 계획 수립(2024. 4.)
- 구의회 재위탁 동의(2024. 4. 25. ~ 5. 3.)
- 위탁업체 모집 공고(2024. 5. 7. ~ 5. 27.)
- 위탁업체 수탁 신청 접수(2024. 5. 13. ~ 5. 27.)
- 재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업체 선정(2024. 6. 5.)
- 위·수탁 계약 체결(2024. 6. 19.)
- 위탁사실 공고(2024. 6. 20. ~ 7. 19.)

바. 소요예산(2024년 ~ 2029년)

– 총 소요액 2,420,170천원(시비 60%, 구비 40%)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합 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
서울강서 시니어클럽	2,420,170	1,743,721	646,449	시 60%, 구 40%

## 4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
- 「노인복지법」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

1) 재위탁: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 
재계약: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「서울강서시니어클럽」의 사무운영을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- 동 서울강서시니어클럽<sup>2)</sup>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 복지 시설로서, 현 운영 법인과의 위탁이 곧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해당 사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·보급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
### 2) 「서울강서시니어클럽」 시설 세부현황

- 소재지: 강서구 방화동로 124-1, 3 ~ 4층

층별	구분	규모(㎡)	사용용도	비고
		297.4	직원 사무실	
3층	사무실	143.8	직원 사무공간	
	직원휴게실	16.5	직원 휴게공간	
	상담실	9.9	참여자 상담 및 교육	
4층	사무실	79.4	직원 사무공간	
	관장실	33.0	기관장실	
	문서고	8.2	서류 보관	
	영상제작실	6.6	영상사업단 활용	

- 민간위탁 사무: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,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,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,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

<b>참 고</b>	<b>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/b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※ 산출방식 :매년 3% 증가율 반영(인건비 및 운영비)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연도	합 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
서울강서시니어클럽	합계	2,420,170	1,743,721	646,449	
	2024년	374,152	269,575	104,577	사비 60%, 구비 40%
	2025년	385,377	277,662	107,715	
	2026년	396,938	285,992	110,946	
	2027년	408,846	294,572	114,274	
	2028년	421,112	303,409	117,703	
	2029년	433,745	312,511	121,234	

## 가. 노인복지법 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
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나.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
제17조의3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)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다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라.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시설의 위탁)

제5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마.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바.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

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

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